

## 외신 동향

### □ Big bazookas (Economist 14.11.8)

#### ○ 최근 일본 중앙은행(BOJ)은 추가 양적 금융완화(QQE) 정책을 발표

- 일본중앙은행(BOJ)는 지난 10월 31일에 열린 정례 금융정책 결정회의에서 작년 4월 이후 추가적인 금융완화 정책을 단행하기로 결정
  - \* 연간 국채매입 규모를 80조엔 수준으로 늘리고, 잔존만기도 7~10년 연장하며 본원통화 규모는 기존 60~70조 엔에서 80조 엔으로 확대하는 방안
- 일본정부의 연기금 또한 증시부양에 한층 공격적인 기조로 전환
  - \* 연기금의 자국 및 해외 주식 보유비중을 현재보다 2배로 확대 예정임을 발표

#### 주요국 중앙은행의 대차대조표 확대 (Riding to the rescue)



-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 선진국 중앙은행은 비전통적 통화정책을 단행 해옴에 따라 이들의 대차대조표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를 보임
- 특히 이들 중앙은행의 자산규모를 비교하면, BOJ의 GDP대비 B/S 상 자산규모는 美 연준, 英 BOE 그리고 ECB를 큰 폭으로 상회

- 최근 글로벌 유가가 하락하면서 양적완화에 따른 물가부담이 완화되고, 유가의 하락으로 디플레이션 우려가 재차 자극될 수 있다는 판단이 크게 작용
- 그러나 경제 내부에서 구조개혁 추진동력이 점차 약화되는 점에 대한 우려도 확대
  - \* BOJ 이사회 멤버 9명 중 4명이 양적완화 확장에 반대하고 5명이 찬성하면서 가까스로 동의를 얻음

○ 이미 약세를 보이고 있는 엔화의 추가적인 절하의 부정적인 영향도 고려할 필요

- 실질임금은 하락하는 상황에서 추가 엔화 약세는 가계의 에너지비용을 25%이상 상승

\* '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 이후 에너지 수요를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

- 수출 대기업은 반사이익을 보는 반면 중소기업은 부정적인 영향이 더욱 클 것으로 예상

\* '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 이후 에너지 수요를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

○ 또한 정치적으로 민감한 구조개혁에서는 큰 진전을 보이지 못한 채, 통화 정책에만 과도하게 의존하는 경향에 대한 우려도 존재

- 장기 경제성장을 재고 및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정책 실행이 더욱 시급

\* 일본의 정부적자는 GDP대비 6% 공공부채는 GDP대비 240% 수준

- 금융완화 정책은 대기업과 소수의 부유층의 이익으로 집중되는 모습

○ 지난 4월 이후의 2차 소비세 인상시점을 두고 재정부와 총리실 간 의견이 대립

- 내년 10월에 10%로 예정대로 인상할지 아니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인상시기를 지연할지 결정해야하는데 예정대로 진행해야한다는 재무상(ministry of finance)과 시점을 조정하자는 총리실의 의견이 충돌하는 상황

- 지난 소비세 인상은 예상보다 낮은 소비지출 및 2분기 경제성장을 급락으로 연결

\* 일본의 '14년 2분기 GDP는 연 수치로 7.1% 하락하고, 근원 물가상승률도 4월의 1.5%에서 9월 1.0%로 하락

\* 최근 아사히신문이 시행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, 일본인의 71%가 2차 소비세 인상에 반대

· 금번 추가 금융완화 정책으로 엔저현상이 지속되며 소비부문에 부담

⇒ 통화정책과 구조개혁에 있어서의 대담한 모습이 필요하지만,  
현재 가계의 소비부문은 매우 취약한 상태이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